

제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3. 3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3월 31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도 규 상 부위원장

최 훈 위 원

윤 석 헌 위 원

* 의결안건 제122호~제135호, 보고안건 제12호~제13호 참여

이 승 헌 위 원

위 성 백 위 원

* 의결안건 제121호~제126호, 제128호~제135호, 보고안건 제12호~제13호 참여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1년도 제5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6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1년도 제5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6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既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21호 『금융감독원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1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승인하는 내용

- (위원) 금융감독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금융감독원의 총수입은 3,998억 원, 총 지출은 3,374억 원으

로 624억 원의 수지차익이 발생하였음. 수지차익은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될 예정임. 2020 회계연도 결산안 및 과거 예·결산 부대의견 이행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금감원이 제출한 결산안은 외부회계법인의 감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되, 사업예산집행 성과 등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부과하여 추후 이행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고 함.

- (위원) 혹시 특별히 강조할 사항이 있으신지?
- (위원) 부대의견 일부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승인안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122호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등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기관 및 임직원에게 대해 신분제재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3호 『(주)핑크 등 4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심사 재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주주에 대한 소송을 이유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가 중단된 사업자 중 그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됨 없이 장기간 경과한 사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허가심사를 재개하고자 하는 내용

○ (위원) 이 건은 한 번 논의했다가 심사를 중단한 후 다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서 우선 해당되는 4개의 기관을 재심사하는 것이고 2개의 기관은 계속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제가 방향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적해 놓은 내용을 보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금융연관업으로써 전통적 금융업과 달리 부적격 대주주 진입시에도 상대적으로 금융시스템 위험 전이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보업이고 경우에 따라서 다수의 경우를 취급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시스템위험 전이 등에 있어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약간 의문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마이데이터산업이 기존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유업이었고 마이데이터업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루는 중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일반적인 다른 금융업과 달리 고객의 자금을 직접 수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상대적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음.
- (위원)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서 그것을 빼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빼면 조작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이것은 참고로 안전 본문에는 없음. 요약에만 있는 내용으로 의결하는 안전 본문에는 없는 내용임.
- (위원) 그렇다면 빼도 되는 것 아닌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 저는 빼면 좀 더 편할 것 같음. 지금 말씀하신 전통적인 중개기능에 비추어보면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앞으로 정보문제는 점차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고 정보라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시스템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굳이 여기에 이 얘기를 표현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
- (위원) 보고자, 뺄 수 있는지?
- (보고자) 빼도 무방할 것 같음.

- (위원) 감사원에서 얘기한 것도 업종에 따라서 여기는 안 된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장기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했지, 그것이 꼭 신용정보업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음. 그리고 유사사례가 있을 때 똑같이 해야 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으로 봤을 때 신용정보업이라고 해 주고 다른 곳은 안 해 준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굳이 신용정보업이 그럴 위험이 적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음. 삭제하고 의결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 (위원) 삭제하고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지?
- (위원) 별다른 의견 없음. 동의함.
- (위원) 그 문맥이 없다고 해도 심사제기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빼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다만, 금융연관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은 아님. 그런 의미에서 자금수취라든지,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시스템리스크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연관업이라는 것은 금융업이 아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위원) 마치 사후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는 것 같은,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장기간 미제에 있는 그 부

분을 우리가 수사고발 되었다고 계속 심사를 안 해야 되겠으나 하는 부분에서 시작했던 것으로 출발점이 다름. 신용정보업은 봐 주고 다른 곳은 안 된다고 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도 아닌 보고자료의 내용을 굳이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음.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은 중요한 것 같음. 유사사례가 있으면 똑같이 처리하라는, 이 건만 봐 주고 다른 건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4호 『삼성카드(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삼성카드(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운영’ 등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준법감시인의 성과평가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한 것이 있음.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성과평가기준이 재무적 성과와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안건이 올라왔었음. 10건의 위반사례가 위원회에 올라왔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 10건 모두 2019년 10월에 당국이 금융기관에 유권해석 내용을 통보하기 전에 발생했던 사례들임. 첫 번째로, 이 10건의 위반사례가 전체사례인지 아니면 조사하면 더 나올 수 있는 사례인지가

궁금함. 두 번째로는 감독당국이 2019년 10월에 유권해석 내용을 통보했는데 그 이후의 위반사례는 위원회에 올라온 적이 없음. 조사를 안 해서 위반사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전부 시정해서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함.

- (보고자) 세부내역까지 다 파악까지는 못했는데 지금까지 올라왔던 사례는 2019년 10월 유권해석 이전의 사례들이 검사 결과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삼성카드(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권해석이 있고 전 금융회사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관련내용들을 반영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검사를 나갔을 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음.
- (위원) 이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나오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 여신금융국장님은 카드여신만 하는 것이고 다른 파트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 그러면 다른 파트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것이 금융회사의 잘못인지 우리가 홍보를 잘못된 것인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앞에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위반한 것이라든지 다음 건 수협은행 위반 건들이 금융회사가 잘못했지만 잘 모를 수 있음. 어떻게 보면 이 건에서 사외이사가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하고 말을 안 하면 총무팀장은 모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지적했을 것 같음. 금융위 사무처에서 과거 1년 동안 사례들을 추적해서 그것을 각 협회나 금융기관에게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조사 나가서 지적되는 것이지만 2019년 10월 이후에는 시정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2021년 3월30일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

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바람. 금감원도 어쩔 수 없겠지만 과태료 40만 원 받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음. 금감원에서 눈감아줄 수 없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금융위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융위 사무처에서 모아서 전달할 것임. 금감원도 가서 엄격하게 적발하되 적발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주 실수하는 것이라든지 자주 틀리는 것 정도는 미리 알려줬으면 서비스하는 차원에서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듦.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5호 『수협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용카드업자인 수협은행이 신용카드회원의 이용한도 상향 시 회원의 결제능력을 심사하지 않아 여전법 제24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6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농신보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위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7호 『예금보험공사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의 근거조항을 모회사 정관에 마련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8호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손해보험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최근의 보험업법령 개정사항을 손해보험 상호협정에 반영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9호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파인만1호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내용

○ (위원) 지금 피인수 되고 난 이후에도 맥쿼리 브랜드는 사용하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그렇지 않음. 파인만자산운용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맥쿼리는 맥쿼리자산운용이 별도로 있게 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0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31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금융위원회 고시에 규정하는 내용

○ (위원) ‘동일법인 내 공매도를 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의 증자참여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조금 오해하면 증자참여가 가능해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지?

○ (보고자) 독립거래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현재도 공매도이나 아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

립거래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 이유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여러 개 운용하는데 실제로 계산의 단위는 펀드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다른 펀드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는 모름. 그래서 공매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펀드를 다 합산해서 이것이 공매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펀드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 이 유상증자 참여 제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공매도 계산의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독립거래단위에 대한 예외가 필요함. 참고로 독립거래단위는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고 감독규정에서 추가적인 6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금투업자나 금융기관이어야 하고 내부분서에 의해서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독립거래단위별로 순보유 잔고 계산이 가능해야 되고 독립계좌를 사용해야 되는 등의 6가지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매도 계산 자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음.

- (위원) ‘동일법인 내’, ‘독립거래단위’ 이런 표현 헷갈리는 것 같은데 독립거래단위와 동일법인이 같은 것이 아니지 않은지? 독립거래단위라는 것이 좀 더 작은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약간 허점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 (보고자) 그 문제는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아님. 예를 들

어 시장조성자인 경우에는 자기 고유재산 운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계산을 하고 있음. 시장조성 계정 내에서 보유한 주식이나 차입한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도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없음.

-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동일법인 내에서는 못한다는 뜻이 된다는 말인지?
- (보고자) 계산 주체를 법인과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실무는 이미 10년 이상 정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 방법 자체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위원) 자본시장과장님은 10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용어가 익숙해서 이야기하는데 제3자가 볼 때 ‘동일법인 내’, ‘독립 거래단위’하는 것이 헷갈리니까 그러지 말고 예를 하나 들어주면 되지 않은지? 예컨대 시장조성자이면 증권회사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부서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어떤 경우에 증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시장조사 목적으로 한 파트는 공매도를 하는 것이고 다른 파트는 다른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시장조성하고 공매도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쪽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정확한 말씀임. 특정 증권사에서 고유계정이 있고 시장조성자계정이 따로 있을 텐데, 시장조성자계정에서는 자기들의 호가를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에서 특정매도가 공매도로 취급될 수 있음. 그러면 그 계산은 자기 시장조성계정 내에서 하게 되는데,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고 유상증자의 고유계정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함. 그러면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어떤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임. 그런데 공매도 계산이나 유상증자는 법인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예외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장조성계정에 공매도가 있는 상황에서 고유계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것임.

- (위원)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음. 알겠음.
- (위원) 신용융자와 개인대주 산식에 보면 첫 번째는 '신용융자 - $1/2 \times$ 개인대주취급액 \leq 자기자본의 95%'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개인대주 - $1/2 \times$ 개인대주취급액 \leq 자기자본의 5%'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밑에 있는 산식의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음. 이를테면 신용융자를 100을 하고 개인대주가 20인데 그러면 개인대주 부분이 절반이니까 10으로 인정이 되면 90%가 됨. 자기자본의 95%이하니까 90이니까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아래 산식에 하게 되면 개인대주가 20이니까 20-10을 하면 10이 나옴. 그런데 이것이 5보다 작아야 된다고 하니까 산식이 안 맞음.
- (위원) 그러니까 10만 하라는 얘기임.

- (보고자) 개인대주 최고한도가 2가지 개념인데 개인대주를 거기까지 할 수 있다는 애기와 신용융자에서 이만큼 빼주겠다는 2가지 의미가 있음. 만약 20%를 하게 되면 신용융자 기준은 만족할 수 있지만 개인대주는 1/2하면 5%까지만 할 수 있는데 10%를 해버리기 때문에 위반이 되는 것임. 왜 그러냐면 전체 한도가 100% 정해져있기 때문에 나눠 갖는 개념이어서,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도록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음. 별도로 이것을 모든 증권회사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면 조금 이상해지는 문제가 있음. 가령 신용공여 총량이 자기자본의 30%밖에 안 되는데 개인대주는 5%밖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제한을 두는 의미가 없게 됨. 어차피 공여의 한도가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90%가 현재 안 되는 것들을 그 제한을 배제해 줘야 될 것 같음. 그래야 개인대주를 자기가 실컷 채워서 한 90%까지 올라오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될 일이지, 제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 적용대상을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음.
- (위원) 그러면 자본시장과장님 말씀은 신용융자가 100이고 개인대주가 10이면 원래는 110으로 해서 위반이 되는 것인데, 110인 경우에는 95로 해서 해결해 주고, 그렇다하더라도 115나 120은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임.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렇다면 자본시장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용융자가 30%밖에 안 되는 경우는 이 산식을 적용하면 무조건

10%밖에 못쓰니까 20%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안 맞으니까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누구는 예외하고 누구는 예외하지 않기로는 'or'로 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산식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적용하지 않거나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다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90은 이것을 적용하고 80은 적용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인위적인 것 같습니다.

- (보고자) 동의함. 선택가능성을 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업계와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 법이라는 것이 있고 시행령이라는 것이 있고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제처에서 기술적인 것이니까 시행령에 하지 말고 규정에 하라고 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 감시라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법에 규정을 하거나 시행령도 감시기능이 있으니까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거나, 그리고 규정에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해서 대개 상향을 함. 그런데 이 부분은 평상시와 다르게 하향한 것임. 더 이상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산식이 진짜 심각한 것인데 산식은 규정도 아니고 금융위원장한테 위임한 것이,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맞는 것인지 의문임.
- (참여자) 유관기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한 부분이어서,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긴 했는데 선례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되도록이면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됨.

- (위원) 위원장한테 위임한 것은 좋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을 신뢰하니까 넘기는 것에 동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정에 넣으면 되는데 왜 굳이 위원장한테 위임해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 특별히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것이 기술적이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개정을 할 때 시행령에 넣으면 절차도 복잡하고 급할 때는 빨리 절차를 밟아야 하니 그런 의미도 법제처에서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봄.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도 사실 기존에 계속 되어 왔고 큰 문제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것이 제대로 감독하고 규제하는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 (위원) 그간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행령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
- (위원) 실무자들이 시행령으로 가져갔는데 법제처에서 내리라고 해서 내려왔다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시행령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간도 없고 법제처에서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위원장한테 위임했다고 해서 산식은 자본시장과장님이 예를 들은 것이고 금감원과의 협의를 하고 공문을 5월3일 전에 보내지 않는지? 다음 금융위가 5월 3일 전에 있으니, 그때 한번 와서 협의된 결과를 공문 보내기 전에 위원님들께 정보를 공

유하고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하고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2호 『○○○○○○○○○○(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이 ○○○○○○○○○(주)의 대주주가 되고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3호 『한국산업은행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산업은행이 사모 주선을 활용한 원활한 기업자금 지원 등을 위하여 이전 재인가시 부과된 인가조건에서 채무증권 등의 사모 주선을 추가하는 조건의 변경을 신청하는 내용

○ (위원) 내용을 보니까 SPV 얘기가 나오고 ‘단기자금시장

(CP) 안정화 지원 관련 프로그램'에 한국은행이 정부와 산업은행이 같이 출자하는 투자채CP 매입기구 있지 않은지? 그것도 관련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지금 직접 문제가 된 것은 저금고 회사채 CP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국산업은행이 SPC의 발행기업의 CP를 주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그 업무는 형식이 사모주선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는 금감원 비조치 의견서로 근거해서 영위하고 있고 향후에는 인가조건 변경이 되면 조건변경에 따라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4호 『한국아이엠씨 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아이엠씨 주식회사가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을 신청하는 내용

- (위원) 우리가 오늘 인가를 하면 라이선스가 발급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다음에 하는 것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인지?
- (보고자) 이것은 예비인가가 아니고 본인가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계획이나 그런 심사는 끝났고, 본인가가 되었다면 실사를 했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직원 채용은 다 완료된 상태임.

○ (위원) 1월에 신청을 했는지?

○ (보고자) 2월에 본인가 신청했음.

○ (위원) 신청한 것에 비해서 빨리 인가가 나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 같이 우리 시장을 나가는 운용사도 있는 반면 하나라도 들어와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고, 가끔 “왜 시장에 안 들어오냐?”고 하면 “인가절차가 복잡하고 길다.” 그런 얘기를 함. 그래서 우리 정부 내에서 하는 것은 원스톱서비스로 신청을 하면 각 부서로 쫓아다니지 않아도 금융위, 금감원에서 인가를 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음. 지금 자본시장감독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감원에 있는 금융중심지 지원단이라는 곳과 금융위에 있는 글로벌금융과에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것은 잘 된 것이고, 앞으로 비슷한 신청이 와야 되는데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이런 곳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자산운용업이 오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력해서 인가를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림. 참고로 제가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할 때 싱가포르에 KIC사무소를 오픈했는데 그때 직원이 서울에서 간 사람과 현지 직원까지 6명 정도였는데 그것을 싱가포르 감독당국한테 얘기를 했더니 싱가포르 감독당국이 본인들이 인가서류를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고 현지직원 3명을 채

용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3년인가 5년간, 사무실도 본인들이 알아봐주었음. 몇 군데 추천하면서 선택하라고 해서 선택했더니 임대료를 30% 할인해 주었음. 물론 싱가포르와 우리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고 그 임대료를 정부가 내 준다는 것은 우리 국민감정에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부 돈으로 임대료도 대신 내 주었던 말임. 그러다보니까 편하게 싱가포르로 갈 수 있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최소한 우리가 금전적인 것은 못 주더라도 인가과정에서 복잡해서 못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팀, 금융위 소관부서들이 대신 해 주어서 “한국에 갔더니 인가가 쉽게 잘 나온다.”는 말이 나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림.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35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내용을 설명함

※ 대통령령 개정에 맞춰 금융위원회 자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수, 기능 등을 확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전 심의

- ☐ 보고안전 제12호 『2020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감독 행정 현황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소관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의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 보고안전 제13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6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21분 폐회)